

글로벌 정책 동향

중소기업의 지속가능성·그린·디지털 전환

2022년 4월호

▶ 종합보고

Part 1: 한국 정부의 2022년도 그린 및 디지털 정책

1. 범정부 그린·디지털 뉴딜 2.0
2. 주요 부처별 그린·디지털 정책 조사분석
3. 주요 부처별 그린·디지털 예산사업 조사분석
4. 주요 부처별 그린·디지털 예산사업 사례

Part 2: OECD 중소기업위원회 동향

1. OECD 중소기업·기업가정신위원회 정책 권고안
2. 중소기업 지속 가능한 금융
3. 중소기업·기업가정신 GREEN 지표
4. 덴마크 GREEN 기업가정신 허브

종합보고 (Executive Summ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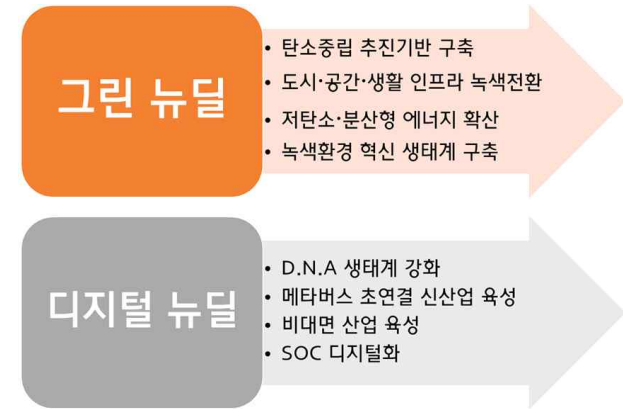
Part 1: 한국 정부의 2022년도 그린 및 디지털 정책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1. 범정부 그린·디지털 뉴딜 2.0¹⁾

- 뉴딜 1.0 대비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여 과제 보완
 - (그린 뉴딜 2.0) 글로벌 탄소중립 논의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탄소중립 과제를 추가하는 등 외연 확대
 - (디지털 뉴딜 2.0) 글로벌 디지털 경쟁 심화 등의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디지털 뉴딜을 경제·사회 전반으로 확산
- 재정지원 강화하여 한국판 뉴딜 성과 확산 가속화 도모²⁾
 - (총사업비) 87.5조 원(뉴딜 1.0)에서 '25년까지 110조 원(+22.5조 원)으로 확대
 - (국비) 18.9조 원(뉴딜 1.0)에서 '22년 21조 원(+2.1조 원) 이상으로 확대

[그림] 그린·디지털 뉴딜 전략



□ 분야별 과제 구성

- (그린 뉴딜) 4개 분야, 11개 과제, 30개 세부과제
- (디지털 뉴딜) 4개 분야, 12개 과제, 25개 세부과제

1) 관계부처 합동, 「한국판 뉴딜 2.0: 미래를 만드는 나라 대한민국」, (2021. 07. 14.),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1589>

2) 휴먼뉴딜 및 지역균형 뉴딜 제외한 재정투자 규모

시사점

- 그린 및 디지털 정책 수요의 증가
 - 코로나 위기 이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추가적 노력 필요
 - 경제·사회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선제적 대응 필요
 - 전 세계적인 디지털 경쟁에서 선도적 지위 유지 필요
 - 탄소중립의 전략적 중요성 증가
- 대내·외 정책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과제 추가) 디지털전환과 탄소중립 등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그린 뉴딜에는 '탄소중립 추진 기반구축' 과제를, 디지털 뉴딜에는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 육성' 과제를 추가
 - (재정 확대) 성과 확산을 위해 재정지원 확대
 - 그린·디지털 뉴딜 1.0 총사업비 87.5조 → '25년까지 110조 (37.1%)
- 그린 뉴딜 정책 과제
 - (탄소중립 추진기반 구축)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탄소흡수원 확충, 탄소중립 인식 제고
 - (도시·공간·생활 인프라 녹색 전환) 공공시설 제로에너지, 자연 녹색 생태계 회복, 안전한 물 관리체계 구축
 -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스마트 그리드 구축, 신재생에너지 확산기반 구축, 그린 모빌리티 보급
 - (녹색산업 혁신 생태계 구축) 저탄소·녹색산업단지 조성, 녹색혁신 기반 조성
- 디지털 뉴딜 정책 과제
 -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데이터 구축활용, 5G·AI 융합, 지능형 정부, K-사이버 방역체계 구축
 -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산업 육성) ICT 융합 비즈니스 지원, 클라우드·사물인터넷 기반 기술 육성
 - (비대면 인프라 고도화) 디지털 비대면 교육 확대, 스마트 의료 및 인프라 구축,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온라인 비즈니스 지원
 - (SOC(사회간접자본, Social Overhead Capital) 디지털화) 스마트 시티, 스마트 산업단지,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

2. 주요 부처별 그린·디지털 정책 조사분석

- 그린·디지털 정책 분석 방법론
 - (부처별 2022년도 업무계획 분석)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³⁾의 2022년도 업무계획 내 그린·디지털 분야 정책 선별
 - (분석 개요) 2021년 발표된 그린·디지털 뉴딜 관련 범부처 정책계획이 반영된 네 부처의 2022년도 업무계획을 검토, 그린·디지털 정책의 실행계획을 분석함
 - (분석 방향) 각 부처의 2022년도 업무계획 내 그린 정책과 디지털 정책을 부처별, 분야별, 정책 수단별로 분류하여 분석함
 - (분석 초점) 그린 정책은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정책을 중심으로, 디지털 정책은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디지털 전환 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함

3) 이하 중기부, 환경부, 산자부, 과기부

- (중기부)4) △디지털 정책의 중심이 되는 스마트공장사업을 그린 정책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공장사업 지원 △중소기업의 탄소 저감 기술개발과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지원사업 추진
 - (그린 정책) △K-스마트 등대공장 및 탄소 중립공장 선도모델 확산 사업 △중소기업의 탄소 저감 그린 기술개발을 위한 공정개선 △고탄소 업종전환 지원 등 중소기업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정책 중심
 - (디지털 정책)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사업 고도화를 위한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 신설 △스마트공장 지원을 위한 제조데이터 촉진 인력양성 사업 △소상공인의 디지털 온라인화 지원사업 등 중소기업과 제조공장의 디지털 전환을 중점적으로 추진
- (환경부)5) 환경정책의 주무 부처로서 탄소중립 경제사회구축을 위한 인프라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디지털 정책은 기존사업에 스마트 인공지능 체계와 예측모형 등을 도입하는 스마트 환경사업에 초점
 - (그린 정책) 탄소중립 사회의 주체가 되는 산업, 금융, 도시, 가정, 지역 등 주체별 녹색 전환을 위한 지원정책과 순환 경제 달성을 위한 폐기물 및 재활용 정책이 한 축을 차지. 탄소 감축을 위한 잠재 기피 자원(유기성 자원-가축분뇨, 음폐수 등), 수열에너지, 수상 태양광, 비위생 매립지의 메탄 감축 사업 등 탄소감축 사업이 또 다른 축을 담당. 여기에 전기 및 수소충전소 인프라 구축사업도 주도
 - (디지털 정책) 환경부의 디지털 정책은 인공지능 홍수관리, 미세먼지 예측 모델 개발 등 디지털 기술의 환경 시스템 적용이 주를 이룸
- (산자부)6) 산자부의 그린 정책은 탄소중립 경제를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확산과 산업·제조업의 탄소중립 전환에 집중하는 동시에 친환경 기술개발을 통한 제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신산업화를 주도. 디지털 정책은 주력산업의 4차산업혁명 기술 적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중점적으로 지원
 - (그린 정책)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수소경제 실현 △친환경 선박개발 △그린철강 및 친환경 화학소재 개발 △친환경 섬유 및 자동차 등 친환경 산업 정책에 주력. 그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탄소포집저장기술(CCUS, 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torage) 및 저탄소 기술 확보에도 집중
 - (디지털 정책)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한 산업생태계 구축, 중견기업 지원, 산학연 협력, 표준선도 등 디지털 경제 전환을 위한 기반구축 사업 중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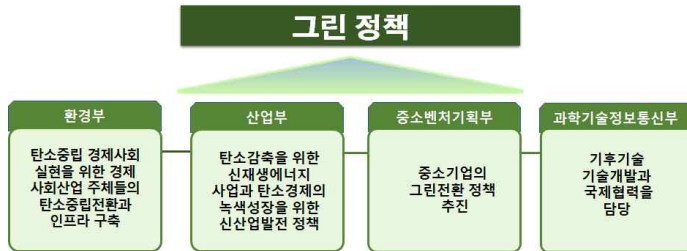
4)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위기를 넘어 혁신으로, 강한 중소·벤처·소상공인 육성」, (2021. 12.), <https://www.mss.go.kr/site/smba/foffice/ex/jobPlan/jobPlanList.do>
 5) 환경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 탄소중립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2022. 01.), <https://www.me.go.kr/mchp/2022briefing/index.do>
 6)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업무계획: 함께 극복·도약하는 산업강국」, (2021. 12.), https://www.motie.go.kr/motie/py/plan/presidentPlan/bbs/bbsView.do?bbs_seq_n=20&bbs_cd_n=38

○ **(과기부)7)** 그린 정책은 기후기술 개발사업 중심. 디지털 정책은 정보통신 주무 부처로서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과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글로벌화 추진 등 종합적 디지털 전환정책을 추진

- **(그린 정책)**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술 메커니즘의 주무 부처로서 기후기술 개발과 국제협력, 네트워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
- **(디지털 정책)**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댐, 메타버스 플랫폼, 인공지능 기술개발 등 4차산업혁명 핵심기술 주도. 정밀 의료, 자율주행차, 스마트제조 등 디지털 기술의 적용 확대를 위한 기술 상용화 정책 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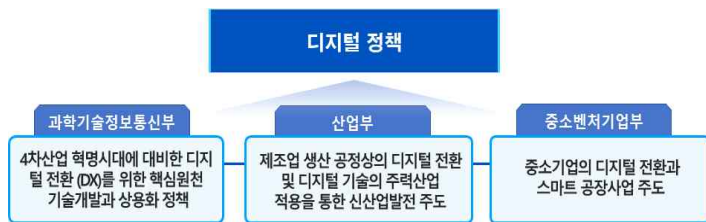
○ **(소결: 그린 정책)** △**환경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산업 주체들의 탄소중립 전환과 인프라 구축 담당 △**산자부**: 탄소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탄소경제의 녹색성장을 위한 신산업발전 정책 주도 △**중기부**: 중소기업의 그린 전환정책 최근 추진 △**과기부**: 기후 관련 기술개발과 국제협력에 주력

[그림] 부처별 그린 정책 분석



○ **(소결: 디지털 정책)** △**과기부**: 4차산업혁명 대응 디지털 전환을 위한 핵심 원천 기술개발 및 상용화 정책 주도 △**산자부**: 제조업 생산 공정상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 기술의 주력산업 적용을 통한 신산업발전 주도 △**중기부**: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공장사업 주도

[그림] 부처별 디지털 정책 분석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업무계획」, (2021. 12.),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738>

시사점

□ 그린·디지털 관련 부처별 정책 개수

구분	중기부	환경부	산자부	과기부	합계
그린	4	15	25	1	45
디지털	3	2	9	24	38
합계	7	17	34	25	83

- **(중기부)** 타 부처 대비 그린 및 디지털 관련 정책이 적은 이유는 COVID-19로 인한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벤처 육성에 정책 방향이 맞추어졌기 때문
- **(환경부)**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 부서이기에 디지털 전략보다는 그린 정책이 압도적으로 많음. 산자부와 같이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이 환경부의 핵심 정책
- **(산자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계 탄소 배출 저감 정책이 많아 디지털 정책 대비 그린 정책이 상대적으로 많음
- **(과기부)** 과학기술 및 ICT 주무 부처이자 국가의 디지털 뉴딜 정책 핵심 부서이기에 그린 정책 대비 디지털 관련 정책이 상대적으로 많음

□ 중기부 그린·디지털 정책 방향 제언

- 탄소중립 달성에 필요한 중소기업의 스마트 그리드, 신재생에너지, 그린 모빌리티 등 분야 진출 혹은 전환을 지원하는 정책 필요
 - **(그린 뉴딜)** 뉴딜 2.0의 재정투자 규모 분석 시 그린 정책 분야 중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이 예산 증가가 가장 높음
 - **(사회적 환경 변화 반영)** COVID-19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기존 소상공인 위기 극복 정책에서 중소기업 지원 중심의 정책 전환이 가능
- 메타버스 등을 활용한 산업 분야 발굴 및 정책 지원 강화
 - **(디지털 뉴딜 신규 편입)** 디지털 뉴딜에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 육성' 분야 신규 편입
 - **(신사업 발굴 및 육성)** 디지털 융복합 가속화로 인한 메타버스 등 초연결 신사업 분야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지 않거나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융합을 지원한다면 신사업 발굴 및 육성 가능

3. 주요 부처별 그린·디지털 예산사업 조사분석

□ 그린·디지털 예산사업 분석 개요

- **(2022년 단위 사업별 예산사업 내역 분석)** 중기부, 환경부, 산자부, 과기부의 2022년도 예산사업 내역서를 검토, 그린·디지털 정책 구성을 분석함
 - **(그린 정책)** 사업명과 사업목적 상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예산사업 중심으로 분석
 - **(디지털 정책)**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는 디지털전환 정책 중심으로 분석

□ 부처별 그린·디지털 예산사업

- **(중기부)8)** 디지털 예산사업은 스마트 제조혁신 관련 기술개발이 중심을 차지. 그린 예산사업은 사업내용 상 일부에 포함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분석에서 제외

8)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2. 01.),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8&bcIdx=1031706&parentSeq=1031706>

- (디지털 예산사업 내역) 중소기업의 스마트서비스 ICT 솔루션 개발 스마트 전통신장 R&D 프로그램 스마트센서, 스마트 제조혁신, 빅데이터 기반 서비스 개발 △현장 수요형 스마트공장 기술개발 등 기술개발 사업들이 주를 이룸. 스마트 공장확산과 정보화 사업이 다른 한 축을 차지함
- (환경부)⁹⁾ 디지털 예산사업은 기존 환경 플랫폼의 스마트화와 인공지능을 접목하는 사업으로 환경 시설의 스마트화 기술도입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린 예산사업은 탄소중립 관련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산자부)¹⁰⁾ 그린 예산사업은 산업 분야의 친환경 순환 경제 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과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친환경 에너지 분야) 신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기반구축과 기술개발 사업 및 제조공정에서의 친환경 소재 기술개발 사업과 친환경 모빌리티에 중점
 - (디지털 예산사업) 소재·부품·장비 산업 내 디지털 기술의 제조업 적용과 관련한 기술개발, 그리고 사업 기반구축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과기부)¹¹⁾ 예산사업 내역서에 4차산업혁명 관련 기술개발 사업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그린 사업에서는 기후 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그린 예산사업) 다양한 친환경 기술 및 탄소 저감 신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미세먼지 관리와 위성정보 빅데이터 활용지원, 탄소순환 시스템 등의 플랫폼 관련 기술개발과 기후 기술 ODA(공적개발원조) 사업 등 국제협력사업을 수행함
 - (디지털 예산사업) 4차산업혁명을 활용한 산업 분야 기술개발과 더불어 IoT, 디지털 트윈 기술, 양자 인터넷 등의 핵심 기반 기술에 대한 개발 및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혁신 기술개발 등 전 분야에서의 디지털 확산 기술개발에 중점

□ 예산사업 내역 종합분석

- (부처별 분석) 4개 부처의 그린-디지털 사업은 총 346개 단위사업, 약 10조 3,409억 원 규모이며, 전체 그린 사업 가운데 산자부와 환경부의 사업이 예산 규모상 가장 크고 디지털 사업예산의 주는 과기부가 차지함
 - (그린 단위사업 프로그램) 네 개 부처 총합 178개, 6조 7,923억 원
 - (디지털 단위사업 프로그램) 총 168개, 3조 5,487억 원 (과기부 110개)

9) 환경부, 「2022년 예산 및 기금 사업설명자료」, (2022. 02.),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127&orgCd=&boardId=1506350&boardMasterId=41&boardCategoryId=&decorator=>

10) 산업통상자원부, 「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자료」, (2022. 01.), https://motie.go.kr/motie/in/ay/budget/budgetlist/bbs/bbsView.do?bbs_seq_n=43&bbs_cd_n=24¤tPage=1&search_key_n=&cate_n=&dept_v=&search_val_v=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사업설명 자료」, (2022. 01.), <https://www.msit.go.kr/contents/cont.do?sCode=user&mPid=75&mId=82>

[표] 부처별 2022년도 단위사업 예산내역서 분석 (사업 수)

(단위: 개, 백만 원)

부처	그린		디지털		총합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사업 수	예산
중기부	-	-	15	619,170	15	619,170
환경부	32	3,709,766	4	334,380	36	4,044,146
산자부	126	2,917,888	39	248,780	165	3,166,668
과기부	20	164,614	110	2,346,372	130	2,510,986
총합	178	6,792,268	168	3,548,702	346	10,340,970

- (정책수단별 분석) 그린 사업은 총 178개 예산사업 가운데 102개가 기술개발 사업(1)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급확산지원(2)이 13개, 지원센터 구축(9)이 11개,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사업(10)이 17개를 이룸. 디지털 사업은 총 168개 예산사업 가운데 103개가 기술개발 사업(1)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급확산지원(2) 17개, 플랫폼 구축지원(3)이 20개, 산업/기업지원(6)이 16개로 구성됨

[표] 번호별 정책 수단 내용

정책 수단 번호	정책 수단 내용
1	기술개발사업(R&D)
2	보급확산지원
3	플랫폼 구축 (정보화 포함)
4	클러스터 조성
5	인력양성
6	산업/기업지원
7	제도 운용 / 규제개선 / 국제 규제 대응
8	해외시장 진출 지원
9	지원센터구축
10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
11	용자지원 / 출연 지원
12	ODA(공적개발원조)

[표] 정책수단별 2022년도 단위사업 예산내역서 분석 (사업 수)

(단위: 개)

정책 수단 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합
그린	102	13	10	3	-	6	5	2	11	17	5	4	178
디지털	103	17	20	4	2	16	1	1	1	3	-	-	168
총합	205	30	30	7	2	22	6	3	12	20	5	4	346

- (소결) 사업 개수 기준, 그린 정책은 산자부의 기술개발사업(1)이 78건으로 가장 많고 디지털 정책은 과기부의 기술개발사업(1)이 68건으로 가장 많음. 예산 기준으로 살펴보면, 그린 정책은 환경부의 산업기반 인프라 구축(10)이 3.1조 원으로, 디지털 정책은 과기부의 플랫폼 구축(3)이 9천억 원으로 최대 규모임

시사점

- 그린·디지털 예산사업 분석
 - (부처별) 4개 부처의 그린 및 디지털 예산사업은 총 346개 단위사업, 10조 3,409억 원 규모
 - (그린) 4개 부처 총합 178개 단위사업, 6조 7,923억 원 규모. 단위사업 개수로는 산자부가 126개로 가장 많으나 예산 규모로는 환경부가 3조 7,098억 원으로 최대
 - (디지털) 과기부가 110개 단위사업, 2조 3,464억 원으로 최대 규모
 - (정책 수단별 분석) 기술개발 사업이 압도적으로 많음
 - (중점 수단) 그린 및 디지털 전략 모두 기술개발사업(1)에 가장 많은 사업이 집중되어 있고, 예산 금액으로는 산업기반 인프라구축(10) 정책이 최대 규모
 - (정책 수단별 집중 부처) 그린 및 디지털 전략의 모든 정책 수단 중 산자부의 기술개발사업(1)이 78건으로 가장 높으며, 예산으로는 환경부의 산업기반 인프라구축(10)이 3.1조 원으로 최대 규모
- 중소기업 관련 정책 제언
 - 중소기업 2050 탄소중립 이행 및 ESG 지원
 - (금융·세제지원) 친환경에너지 전환을 위한 시설 도입지원 및 투자세액공제 필요
 - (ESG 로드맵 제시) ESG 경영에 어려움을 느끼는 중소기업에 ESG 경영 로드맵을 제시하여 중소기업이 주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지원 필요
 - (ESG 지원 자금 조성) 정부와 대기업 합동으로 ESG 지원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ESG 역량을 강화하고 대기업은 우수한 공급망 확보 가능
 - 기술개발사업 지원
 - 12개의 정책 수단 중 기술개발사업(1)에 사업이 가장 많으므로, 새로운 정책 고려 시 이를 중심으로 설계 필요
 - (한계기업에 특화된 R&D 지원) COVID-19로 인해 한계기업으로 분류된 중소기업 대상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정책 마련 필요
 - (지원방식 다변화) 정부의 자금지원 방식을 출연금에서 투자 및 융자 방식으로 전환 고려
 - ODA(공적개발원조) 활용
 - (유럽 사례) ODA 사업 진행 시 자국의 중소기업을 개도국에 진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유럽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수 있음
 - (중소기업의 ODA 참여 방안) ①우리나라 주도의 프로젝트 참여 ②중소기업의 개도국 진출 시 금융 및 경영컨설팅 지원

4. 주요 부처별 그린·디지털 예산사업 사례

□ 주요 부처별 그린·디지털 대표 사업

구분	부처명	대표 사업
그린	과기부	기후기술 협력기반 조성 (ODA, R&D)
	과기부	기후기술 국제협력 촉진 (R&D)
	산자부	청정생산기반 공생기술개발 사업
	산자부	전기 이륜차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실증
	산자부	e-모빌리티 기업지원센터 구축지원사업
	산자부	산단 내 클린 팩토리 구축지원 사업
	환경부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
	환경부	환경산업 수출기반 육성지원
디지털	환경부	그린뉴딜·탄소중립 국제개발협력사업
	중기부	ICT 융합 스마트 공장보급·확산 사업
	과기부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R&D)
	과기부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시사점

- 부처별 그린·디지털 예산사업 분석
 - (중기부)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과 확산으로 표준기반 스마트공장 구축의 기반을 조성하고 수준 확인 제도 운용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스마트공장 구축 확산을 지원하여 초기 스마트공장 생태를 구축하는 데 일조함
 - (환경부) 기후환경 및 개도국 환경사업 등 국제협력 수요가 많은 분야 정책을 주를 이루며, 자원순환 및 환경경제를 촉진하는 정책을 지향함
 - (산자부) 기획재정부와 산자부의 예산으로 기획되는 산자부의 그린·디지털 사업은 청정 및 환경 설비 기술과 에너지사용 저감에 중점을 두고 있음
 - (과기부) 기후변화대응과 기후 기술협력 기반 조성 등 범지구적 현안 분야 국제협력(ODA 형태)의 기회가 많다는 점이 과기부 예산사업의 특징이며, 사업내용은 R&D 기술이 주를 이룸

Part 2: OECD 중소기업위원회 동향12)

1. OECD 중소기업·기업가정신위원회 정책 권고안13)(초안)

- (배경) 회원국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일관성 있는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에 관한 정책을 도입시키고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
- (권고안 작성 일정) '22년 4월 12일 중소기업·기업가정신위원회(CSMEE, Committee on SMEs and Entrepreneurship) 회의에서 권고안 초안을 논의, 다음날 승인 및 배포. '22년 6월 9~10일 개최 OECD 장관급 회의에서 채택 논의 예정
- (내용) △중소기업 및 기업가정신 정책에 범분야(cross-cutting)-일관성 있는 접근법을 도입 및 적용 △중소기업과 기업가의 전환 및 회복탄력성을 촉진 △중소기업 및 기업가의 재원 접근성 향상

2. 중소기업 지속 가능한 금융14)

□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 니즈 충족을 위한 다양한 금융수단

- (녹색대출) 녹색전환 프로젝트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수단으로 녹색대출이 있으며 에너지 효율 담보대출, 전기자동차 대출 등을 포함
- (녹색채권) 녹색채권은 기후, 환경 관련 프로젝트 자금 조달을 위해 설계된 고정 수입 상품으로 규모, 안정성을 갖춘 중소기업이 채권 발행
- (녹색지분 상품) 신생기업, 친환경기업이 위험 감수의 사업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지분 투자가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음
- (하이브리드 금융상품) 대출을 지분 보유로 전환하는 조건을 수반하는 전환 대출이 하이브리드 금융상품에 해당
- (ESG연계 상품) 상품 발행자의 지속가능성, ESG와 연계된 새로운 개념의 금융상품으로 ESG 연계 대출 또는 ESG 연계 채권이 포함됨

□ 중소기업의 녹색전환을 위한 금융 지원

-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직접금융 수단은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대출 제도로서 중소기업 금융에 특화된 공공은행에서 대출 제공이 가능
- 정부가 중소기업에 직접 지분 금융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부채 금융은 리스크가 높지만, 혁신적이고,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에 특히 중요
 - 비부채 금융은 직접 지분 투자 또는 보조금의 형태를 취할 수 있음

12) 상세 내용은 본문 90페이지 참조

13) 보고서 제목: Draft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SME and Entrepreneurship Policy - An OECD Strategy for SMEs and Entrepreneurship, 2022. 04. 14.

14) 보고서 제목: Financing SMEs for Sustainability: Drivers, Constraints and Policies - First Draft Report, 2022. 04. 07.

□ 중소기업의 녹색금융 접근을 지원하는 국제적 이니셔티브

- 최근 구축된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기자금 조달에 관한 OECD 플랫폼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 금융 수요, 공급에 대한 장벽을 낮추기 위해 노력
 -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지식공유 및 정책논의를 촉진하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3. 중소기업·기업가정신 GREEN 지표15)

- (보고서 개요) 2022년 4월 12~13일 개최된 제2차 OECD 중소기업·기업가정신위원회(CSMEE)의 컨셉노트의 일부로, 2021-22년간 프로그램계획(PWB, Programme Work Budget)에 따른 '녹색 전환에 대한 SME 기여 강화' 활동의 일환
- (보고서 주요 내용) 중소기업의 환경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5가지 그린지표(green indicators) 제시, 정량적 정보 제공을 통해 OECD 회원국의 녹색 정책 설계 및 개선 지원
- (5가지 지표) △중소기업 에너지 소비량 △중소기업 에너지 집약도 △중소기업 에너지 가격 부담도 △중소기업 이산화탄소 배출량 △녹색 기업가정신

4. 덴마크 GREEN 기업가정신 허브16)

□ 보고서 개요 및 목적

- (개요) 덴마크의 녹색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해 해당 분야 국제 정책 관행의 현황을 검토. 덴마크 기업청(Danish Business Authority)의 지원 하에 작성
 - 분야 선도국이자 덴마크와 유사 조건 보유한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사례 분석
- (목적) 덴마크 기업청의 新전략 '덴마크 비즈니스 진흥 2020-23'(Business Promotion in Denmark 2020-23)의 목표 달성을 위해 세부 이니셔티브 구현 지원
 - 국제 정책 관행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교훈 도출 및 정책 제안

□ 주요 정책 제언

- (통합적 전략 수립) 녹색 기업가정신 지원에 참여하는 공공·민간 행위자 활동의 일관성 구축 필요
- (원스톱 상점 구축) "범 비즈니스"(whole business) 서비스 제품군을 제공하기 위해 녹색 기업가정신 지원 원스톱 상점 개발 필요
-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 지원 확대) 녹색 기업가를 위한 전용 프로그램 도입을 포함, 전문적 인큐베이터·엑셀러레이터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15) 보고서 제목: Towards a pilot dashboard of SME greening and green entrepreneurship indicators - Concept Note, 2022. 03. 29.

16) 보고서 제목: Policies to support green entrepreneurship across selected OECD countries - Building a hub for green entrepreneurship in Denmark, 2022. 03. 30.